



“호남인은 분노한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진이 지난달 31일 오후 조선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탈락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분노의 광주 “로스쿨 재조정하라”

조선대 이사진 총사퇴 ... 총동창회 등 시민 1천여 명 궐기대회

조선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데 대한 광주지역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지역 사회는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하루동안 결과 발표 연기와 전격 발표를 오가는 갈광질광 행보를 보인 데다, 광역단체별 안배를 주장한 청와대에도 정면 충돌하는 등 혼란상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오는 4일로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법학교육위의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조선대는 명단에 없었다.

조선대 총동창회는 1일 오전 10시 40분 교내 정문 옆 설립기념탑에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궐기대회를 갖는다. 궐기대회에는 조선대 동문과 조선대 산하 각급 학교 구성원 등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조선대 김용채 이사장 등 이사진 7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조선

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조선대 법학과의 전통과 역사, 준비 과정 등 어느 것 하나를 따져도 로스쿨 인가대학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 이사진은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 정지 처분신청, 로스쿨 인가 심사 자료 폐기금지 가져본 신청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일로 예정된 최종안 발표에서 다시 ‘나뉘먹기식’ 선정으로 조선대가 배제된다면 당력을 모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이 어떤 기준 또는 근거에 의한 심사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반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靑-교육부 ‘로스쿨 배분’ 충돌

최종발표 4일로 연기

정부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한 데 이어 경남 지역 대학을 로스쿨 대학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비롯, 최종 선정안 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어

‘로스쿨 후유증’이 확산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을 추가선정하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대 일부의 개별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

하면서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권역별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각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각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각 40명 등 총 1

천40명이 배정됐다.

지방권역은 대전권역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860명이다.

청와대는 법학교육위안에서 경남 지역 대학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위배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의 대립했다. /연협뉴스

1석 늘거나 **광주·전남 국회의원** 1석 줄거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이 여수와 광주 서구의 현행 각 2개 선거구 유지 의사를 나타내 이들 지역의 선거구수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신당과 민주당이 전남지역의 현행 의석수를 유지 하는 의견을 내놓아 한나라당과 협상 결과에 따라 광주 광산구 분구까지 감안 할 경우, 18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의석수는 1석이 늘어 총 21석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구 하한선이 붕괴된 지역구는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최악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의석은 1석이 줄어 19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달 31일 18대 국회선거구 확정위원회는 국회 제4회의실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

주당, 국민중심당, 민노당 등 국회 의석 보유 정당으로부터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은 현재 행정구역이 분

또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지난 17대 국회 기준을 적용, 10만1천376명~30만4천129명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제시했으며 한나라당은 10만4천~31만2천명을 주장, 영광·함평과 강진·완도의 지역구 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재편을 통해 전남지역 의석수를 현행 13개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은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전남지역 의석수 축소(최대 2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1개가 늘어거나 최대 1개가 줄어 줄어 들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野, 여수·광주 서구 현행 유지 일치

협상 결과에 따라 광주 광산구 분구

영광·함평, 강진·완도 통폐합 가능성

구원 경우 어느 한 곳의 선거구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경우에만 통합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개의 선거구지만 인구 상한선이 무너져 1개 선거구로 와 여수의 선거구는 18대 총선에 서로 현행 각 2개의 선거구를 유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북아 중심 상품 거래소’

광주 유치 본격 추진

年 5천억 효과 기대

광주시에 ‘동북아 중심 상품 거래소’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상품거래소’는 뉴욕의 상업거래소, 런던의 금속거래소처럼 금, 구리, 광물 등 상품을 사고 파는 일종의 선물·현물 거래시장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에 당초 대통령 공약집

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품거래소 유치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품 거래소는 2009년께 부지 1만6천㎡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2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동북아 상품거래소를 유치할 경우 연간 5천억원 규모의 거래수수료가 생기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1일 TF팀 전체회의를 갖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시에 제시한 공약은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성,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단지 R&D특구 지정 등 12대 사업이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월 1일 광주철도청광기행에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유망학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